

국회 대정부질문 재개 여야 격돌 예고

평양공동선언·소득주도성장 등 쟁점 수두룩

오늘 외교·통일·안보, 2일 경제, 4일 교육 질의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고,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역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격할 방침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홍익표·김한철 의원이 민주당 대미특사단으로 방미길에 오르면서 박주민·민홍철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

고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화할 조짐을 보인바른미래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이기구·김정우 의원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출격한다.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명우 의원이 질의한다. 심 의원의 사건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고일 의원을 대신해 심 의원이 교체 투입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이연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태에 대해 방어기 아니라 거센 공세를 퍼붓겠다는 전략이다. 심 의원의 이번 행정정보 취득이 불법임을 분명히 짚고, 충분한 검증 없는 자료 공개를 통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심 의원의 실수 수색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소재로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꼽힌다. 심 의원의 행정정보 취득 문제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치 브리핑

주승용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8만3천여건”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0일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8만3,04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유형별 화물차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9,128건, 2016년 2만6,576건, 2017년 2만7,34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909명, 부상자는 12만6,7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교통사고 발생 유형으로는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가 총 6만2,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대 사람 사고가 1만7,0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 부의장은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 과속”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전개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탄력근로제 개선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중소상공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유연한 근무를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그 후 산업현장의 고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4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보다 하루속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실정이다. 장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3년간 국정원 등 개인정보 조회 5,463만건”

국정원 등 14개 기관이 경찰의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 3년간 국민의 개인정보 5,463만 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지난달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기관 온라인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은 주민조회 1,634만건, 수배 1,620만건, 신원조회 1,353만건 등 총 5,463만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 조회 허용의 문제는 관리주체인 경찰이 조회를 허용한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의 남용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조회 시스템’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조회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최근 5년간 밀입국 적발 162명에 달해”

최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지난달 3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밀입국 또는 무사증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50건,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한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42명이 검거됐



다가 2014년 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5년 43명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0명, 2017년 39명으로 꾸준히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밀입국 시도가 많은 지역에 밀입국·불법체류·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장 놓고 시-의회 정면 충돌

의회 “국비추진 의회 경시” 시 “상임위에 사전 설명”

광주시가 국비지원을 통해 상설공연장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시의회는 의회가 추경심사에서 예산 삭감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시민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세계광엑스포 주제를 리모델링해 영화·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사업비를 10억원으로 책정하고, 행정안전부 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했다.

그러나 브랜드 상설공연장은 시의회가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당시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5억7,000여만원을 전액 깎았다.

예결위는 “주제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근거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내년 본 예산에 세워져 추진해도 된다는데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삭감이유를 설명



손흥민이 떠나는 민주당 대미특사단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이 지난달 3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시의회는 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가 상설공연장 사업을 재추진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버리면 시민이 부여한 예산심의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며 성토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상설공연장

재추진 방침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형일 예결위원장은 “시장 관심사업이라고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며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교부금 편성을 사전에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장인 교육문화위원에게 이미 설명했고 서명까지 받았다”며 “브랜드 상설공연장 사업은 광주의 문화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현안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성수 기자

이명박·김기춘·조윤선 같은 날 ‘법정’ 선다

5일 오후 2시 선고...MB 1심 ‘다스 실소유’ 핵심 쟁점

앞선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의 주역들이 오는 5일 같은 시각 법의 심판대 위에 선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운명이 한날한시에 결정된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

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달라지리라 전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하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의 주요 골격이기 때문이다.

중법정에는 오후 2시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지류’ 격인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이미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으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어린이집 월 7만원 운영비 지원

전국 첫 사례...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박차

전남도가 어린이집에 반별로 월 7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초로 반별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87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에서는 모두 1,214개 어린이집에서 약 5만명 아동을 7,030개 반으로 나눠 보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저출산으로 원아가 줄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확보, 11월부터 반별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정근산 기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억원, 어린이집 공기정정기 설치비 18억원도 투입한다. 또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확인장치 설치비 2억7,000만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간제·휴일 보육도 확대해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선택 폭도 넓히는 등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 7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